

후보자 2명 압축뎌 사실상 결선투표...1위 후보 불리할 수도

민주당 광역단체장 2단계 경선...광주시장 경선 영향은?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할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선출 시 1·2차 경선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현 당규의 '공천관리위원회 심사로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선정하고 경선방법을 마련한다'는 규정을 '2~3인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공관위는 1·2차 경선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구체화했다. 즉 후보자가 너무 많은 광역단체의 경우 1차에서 '예비경선'(컷오프)을 통해 다수의 후보를 2인 혹은 3인으로 압축, 2차 본 경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2단계 경선'을 실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후보 난립'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서울과 광주를 꼽고 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는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여하는데, 광주도 무려 7명의 주자들이 출사표를 던지는 등 과열 양상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공관위에서 자체적으로 컷오프를 하는 것보다 1, 2차 예비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선 과정을 역동적으로 만들어 흥행을 일으켜야 한다는 전략적 접근책으로도 풀이된다.

최고위가 이런 방침을 발표하자 각 후보 측에서는 분주하게 득실을 계산하는 모습이다. 당내에서는 2단계 경선을 도입할 경우, 2차 본경선이 사실상 결선투표처럼 작동하면서 현역 단체장이나 1위 주자에게는 다소 불리하게, 후보 주자에게는 다소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수의 경쟁이 '1위 대 2

1차 컷오프, 2차 본경선

3위 이하 표 2위 결집 가능

3명 압축뎌 효과 없을 수도

위'의 대결로 압축될 경우 3위 이하의 표심이 2위에 결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선두권 후보들 사이에서는 경쟁계도 나오고 있다. 단계적 경선이 예비 후보자들 간의 이합집산 현상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단계적 경선이 결선투표와는 개념이 달라 1위 주자에게 특별히 불리한 제도가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2차 경선 후보자가 3명으로 압축될 경우, 결선투표 효과는 거의 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2차 경선 후보가 두 명으로 압축된다 해도 3위 이하 후보들의 지지자들이 2위 후보에게 불리기는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2차 경선 후보를 몇 명으로 정하는냐를 놓고도 예비 후보들 간의 입장 차이가 있어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기에 광역단체장 경선의 경우, 권리당원 50%에 일반 시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게 돼 있다는 점에서 단계적 경선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단계적 경선은 예비 후보자를 두 명으로 압축하지 않는다면 역동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는 결국 결선투표 형식이라는 점에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1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바른미래당 광주시당 주최로 '5·18 특별법 제정 성과 및 향후 과제 보고대회'가 열렸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 하태경·권은희 최고위원 등이 5·18단체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5·18 특별법은 바른미래당 '1호 성취' 법안" 광주시의회서 성과 보고대회

바른미래당이 1일 광주를 찾아 '5·18 특별법' 성과 보고대회를 했다.

박주선 공동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 권은희·하태경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5·18 특별법 제정 성과 및 향후 과제 보고대회'에 나란히 참석했다.

박 공동대표는 "정의의 다시 세우는 5·18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회 통과를 마친 후 처음으로 저희 바른미래당이 광주 시민들을 찾아 보고 드린다"며 "바른미래당이 창당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제1호 성취'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박 공동대표는 "대표 취임 후 여야 대표·원내대표를 만났을 때 반드시 2월 국회에서 5·18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빈손 국회'로 규정할 수밖에 없고 여야 협치는 없다는 '업포 아닌 업포'를 내 오늘 결과를 일궈냈다"고 자평했다. 이어 "이제 위원회 구성과 활동을 감시·감독하고, 격려·성원을 하는 것이 바른미래당의 역할"이라며 "진지한 조사 활동과 엄정한 조사 결과 도출을 위해 소임과 역할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자유한국당 김성

태 원내대표에게 다른 법은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5·18 특별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간절하게 호소했다"며 "한국당 측에서도 그런 저희들(이야기)을 온전하게 받아줘서 결국 다른 법들과 함께 통과 됐다"고 설명했다. 또 "어제 본회의 재석이 202명 중에 44명이 반대나 기권을 했다"며 "온 국민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도 44명이 반대·기권을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이 길이 얼마나 험난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은 국민의당 시절 5·18 특별법을 당론으로

정해 법 통과를 함께 추진했던 민주당과 당 측을 향해 날을 세우며 법 통과에 바른미래당의 역할이 컸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 공동대표는 민평당 의원들을 겨냥한 듯 "(호남 유권자들이)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줘 국민의당에 참여했던 의원들이 이 자리에 함께했다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다"면서도 "물론 그분들도 이 법 통과에 많은 노력을 했지만, 교섭단체가 구성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빛이 밖으로는 나오질 않았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민주당 지방선거 후보 등록 1차 서류접수 심사

광주시당 85명 전남도당 27명 예비후보 자격 부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이 입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내부 심사를 거쳐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등록 자격을 부여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1일 "지방선거 예비후보등록을 위한 1차 서류접수후보자 99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 총 85명에 대해 예비후보 등록 자격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위원장 김명술) 총 5차에 걸친 검증회의를 열었으며, 부적격 대상자에 대한 면접 심사를 했다. 이를 통해 적격 85명, 부적격 3명, 서류보완 4명, 정밀심사 5명, 부적격기준 대상자 중 2명을 검증위원회의결로 중앙당 최고위에 심사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초단체장 후보자 18명, 광역의원 후보자 32명, 기초의원 후보자 35명 등 총 85명에게 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등록자격을 부여했다.

광주시당은 오는 7일 오후 5시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위한 검증서류 추가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도 1차 서류접수자 171명중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제출한 27명에 대해서만 예비후보 자격을 부여했다. 전남도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위원장 박병중)가 서류를 접수한 결과 27명(16%)만 정상적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대부분 후보자들의 제출서류가 미비한 것으로 판정했다. /박정욱기자 jwpark@oangrok.com

민평당·정의당 공동교섭단체 논의 탄력받나

조배숙 "의사결정 참여 중요" 이정미 "제안 오면 입장 낼 것" 구성원 이용호 의원 참여 밝혀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국회에서 공동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전되는 양상이다. 아직 공식 논의의 장이 마련되지는 않았지만 양당의 인사들이 언론인터뷰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밝히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지난달 28일 'YTN 라디오 신윤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아직 민평당의 공식제안은 없으나 제

안 이 온다면 논의과정을 밝히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개혁 방향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 탄핵연대를 개혁입법연대로 발전시켜 나가는 틀 안에서 민평당이 국회에서 충분히 협력하고 연대해야 할 대상이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보다는 민평당 측에서 우호적인 입장이 더 우세하다. 민평당 조배숙 대표 측 관계자는 1일 "어느 쪽이든 일정은 있지만 교섭단체가 되면 국회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다"며 "정의당과 공동교섭단체를 추진하는 것은 당의 정체성과는 크게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국회법상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선 국회의원 의석수가 20석이 필요하

다. 현재 민평당이 14석이고 정의당이 6석으로 두 당이 합치면 20석으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민평당이 공동교섭단체 구성 문제를 먼저 제기한 이유는 비교섭단체일 때 겪는 어려움 때문이다. 비교섭단체는 국회 내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등을 다루는 협의에 깊이 참여하기 어렵다.

민평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민평당 입장을 국회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교섭단체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당 모두 당내에 반대도 만만치 않아 이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정의당의 경우 정체성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민평당의 박지원 의원이 1일 TBS '김어

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민주당과 민평당, 정의당이 '개혁세력'으로서 힘을 합칠 것"이라면서도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대해 "정체성과 가치관 때문에 우리가 창당을 했는데 정의당과 우리가 정체성이 맞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국민의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남아 있는 이용호 의원은 지난달 28일 "민평당과 지역적으로 겹치고 정책도 많이 공유하고 있어서 민평당이 추진하는 교섭단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면서 "무소속으로 활동하는 것보다 의정활동 면에서 힘이 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민평당에 입당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박지경기자 jkpark@

oticon PEOPLE FIRST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오티콘코리아 광주직영점

“서울 본사와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보조금전용 보청기
- 보청기 테스트 &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062-364-8800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90% 융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연금발전소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고박고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 평면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5,000평 이상)

이사업역 | 전남대 지질학과 줄, 방송대 중어중문학과 줄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